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홍보전산과)

의안번호	제189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0. 5.)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 임무(안 제2조)
- 나. 홍보대사 위·해촉(안 제3~4조)
- 다.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 라. 홍보대사 콘텐츠 저작권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8. 17.~9. 6.(20일간),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홍보대사(弘報大使)란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의 홍보 활동을 대표하여 담당하는 홍보단을 뜻하며 홍보대사는 거의 직위가 없음. 홍보대사로는 주로 연예인(배우, 연극인), 가수, 유명인, 운동선수 등을 위촉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행사나 홍보를 하고 있음.
- 민간기업 뿐만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지역 소개를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우리 구는 2008년 구청장 방침으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배우 정보석, 전원주 등 7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문별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로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

- 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임무)는 홍보대사의 임무로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활동,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을 홍보대사의 역할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위촉)는 홍보대사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으로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대사 위촉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K-POP 가수, 아이돌 및 유명 연예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안 제4조(해촉)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조항으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운영)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홍보대사의 위촉과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예우 및 보상)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의전에 필요한 예우를 하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저작권 등)는 홍보대사의 저작권에 관한 조항으로 홍보대사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

한 저작권 등이 구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성북구 정책이나 지역사회를 소개를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할 경우 정책의 인식 수준, 홍보 기관의 인식 수준에 영향이 있고, 홍보대사의 유명도, 매력도 차원에서도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 활용을 통해 빠른 속도의 공유와 전달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현상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홍보대사 운영은 자치사무¹⁾로서 조례 입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